

살인인 정부부는 몰려나라

← 이들이 바로 살인자다 →



검찰의 '진상 은폐·조작'과 조중동의 희생자 '두 번 죽이기'에 맞서 용기 있게 진실을 고발한 <PD수첩>에서 고(故) 양희성 씨의 아들 양종원 씨는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나라고 없는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나라는 정말 싫어요" 라고 말했다.

이명박, 김석기, 검찰, 조중동 같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죄책감이 없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감이 없는 사이코패스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강호순의 연쇄 살인극까지 용산 참사에 쏠리는 눈을 돌리는데 이용할 만큼 파렴치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강호순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살렸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국민일보》)고 한다.

이들의 우두머리인 이명박은 지난 SBS 토론에서 철거민 6명을 죽인 게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벌 건설사들의 돈벌이를 위해 한 겨울에 세입자들을 길바닥으로 쫓아내는 게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다. 용산4구역 재개발에서 삼성물산이 얻는 이익만 1조 4천억 원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강부자를 위해 많은 '일'을 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의 복지를 삭감하는 일,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 일들도 "열심히" 하다보면 용산 참사같은 끔찍한 "실수"들이 나올 게 뻔하다. 그런데 이 상황에

서 김석기를 경질하면 "누가 일을 하겠냐"는 게 이명박의 걱정이다.

사이코패스

더구나 경제 위기 속에 반서민·반민주 개악에 박차를 가하라는 재벌과 보수파의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경제 성장을 위해 인권이나 민주화를 억압[하느] ... 잔인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 이제는 잔인한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안 될 기로에 섰다"고 했다. 그래서 이명박은 MB악법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용산 참사 항의 투쟁을 계기로 이명박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제2의 촛불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압력 때문에 민주당은 이명박에 맞서는 시늉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과 별로 다를 것 없는 박근혜도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위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어깃장을 놨다. 물론 원조 FTA·비정규직 확산·뉴타운 추진 정당인 민주당이 일관되게 이명박의 정책을 반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거대한 '거리의 투쟁'과 '거리의 정치'다. 김석기 경질뿐 아니라 구속·처벌이 필요하고, 나아가 재벌·부자들만을 위한 온갖 정책과 정부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그래야 '있는 사람에게만 좋고,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 나라를 바꿀 수 있다.

막장 검찰은 진실 은폐·조작을 멈춰라!

"스물일곱 명의 검사와 백여 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동원되어 2주간 조사한 결과가 고작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 뿐"(유가족)이다. 설상가상으로 철거민 6명을 구속하고 농성자 25명을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불길 속에 아버지를 잃고 다리가 부러진 철거민은 구속하면서 방화살인

범 김석기는 서면 수사만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석기가 두 차례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진압 계획을 승인했으며, 작전 시작과 마무리 보고까지 받았지만 '직접 개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칼라TV'에서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할 때는 무시하더니 난데없이 압수 수색을 한 것도 황당하다. 유가족들은

망루에서 뛰어내려 살아 있던 두 사람이 왜 불타 죽었는지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까지 있지만 검찰은 계속 모른척하고 있다. 검찰에 항의하던 유가족을 경찰이 폭행하는 기가 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예정된 결론

애초부터 검찰 조사는 진실을 은

폐·조작해 김석기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폐를 쓰던 철거민들이 도심 테러를 하다가 스스로 불을 내서 죽었다'는 게 처음부터 예정된 결론이었다. 인수위 출신의 MB맨 정병두에게 수사 책임을 맡길 때부터 예고된 결과다.

검찰은 'PD수첩'이 경찰·용역 합동 작전의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자 최종 수사 발표를 9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을 은폐·왜곡하고 ... 살인진압의 희생자인 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드는"(유가족) 정권과 검찰, 경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의 본질은 바뀔 게 없다.

용산 참사가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반서민 '속도전'이 낳은 비극이며, 이명박·김석기가 살인자라는 진실도 바뀔 게 없다.

쟁점을 확대해 명박 퇴진으로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조중동 쓰레기

지난 주말 용산 참사 항의 집회는 '촛불 시즌2'가 시작됐음을 보여 줬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구호는 바로 "살인정권 물러나라", "명박 퇴진"이었다.

사람들은 용산 참사 이전부터 커커이 쌓인 불만을 안고 이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 이 운동은 지난해 가을 금융 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 속에서 벌어졌다. 이명박은 부자들에게는 중부세 감면과 건설사·은행 빚 갚아 주기라는 선물을 안겼지만 노동자·서민에게는 고통만 강요했다.

이명박은 용산 참사 주범이면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방송 장악, 비정규직법 개악, 민주주의 후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MB악법 추진자다. 이런 누적된 불만들이 분출하면서 용산 참사 항의 운동의 요구는 순식간에 정권 퇴진으로 발전했다.

총체적 불신

따라서 이명박정권용산참사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명박에 반대하는 여러 쟁점을 둘러싼 운동을 지금부터 연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대책위는 우선, 지금 부상하고 있는 MB악법 반대 문제를 용산 참사 운동과 연결해야 한다. 경제 위기와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쟁점 확대는 용산 문제가 묻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명박 자신이 운동의 배경에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후퇴하면 다른 불만들도 동시에 터져 나올까 봐 김석기 경질이나 대통령 사과조차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런 만큼 용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에 반대하는 여러 운동을 총체적으로 연결시키고 힘을 모아야 한다.

MB악법 반대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단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계투기 소재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쟁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운동의 단결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이하 국민회의)는 내부 논쟁 끝에 2월 7일 3차 범국민대회를 대책위와 공동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운동의 단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촛불항쟁 이후 이명박의 반서민·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 시즌2'를 위한 기구임을 자임하며 결성됐다. 그런데 지금 바로 '촛불 시즌2'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국민회의의 본래 결성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이 내려진 회의에서 처음

에는 공동개최에 대한 지지가 많았지만 참여연대 활동가가 끝까지 반대하면서 공동개최가 무산됐다고 한다. 이 활동가는 대책위가 국민회의의 활동 영역과 분야가 다르며 국민회의의 활동을 정책 제시로 제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정책 제시 구실만 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회의의 내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 오히려 국민회의가 운동을 앞장서서 조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는 단체들이 많다. 운동 건설에 대한 국민회의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지난해 12월 MB악법

저지 과정에서도 국민회의와 별도로 MB악법 저지 운동을 위한 단체를 또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운동 참가가 국민회의의 활동이 아니라면 왜 2월 1일 야4당과의 집회는 공동주최했는가. 결국 이번 집회 공동주최를 반대한 단체들은 민주당과의 공조는 중요시하면서, 거리의 운동과는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명박이 청계광장을 폐쇄하며 탄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국민회의는 대책위와 함께 제2의 촛불 운동 건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

MB악법은 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다

용산에서 6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명박 불도저가 겨냥하는 핵심 목표는 바로 노동자들이다. 특히 지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MB악법은 안 그래도 팍팍한 노동자들의 삶을 쥐어짜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고통을 가중시킬 비정규직법 개악, 최하층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에 노조 전입자 임금을 일방적으로

금지해 노조를 약화시킬 노조법 개악까지 추진되고 있다.

방송법, 산업은행 민영화법은 재벌의 배를 불리는 대신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삭감·정리해고를 강요할 것이다. 전경련 등은 아예 근로기준법을 뜯어고쳐 임금삭감·정리해고를 법제화하자고 주장한다.

'마스크법', '사이버모욕죄'는 이런 개악에 맞선 노동자들의 조직적 행동과 비판을 입막기 위한 '안전 장치'다.

이미 곳곳에서 비정규직 해고, 임금삭감 등의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반노동자적 공격과 개악들을 막으려면 집단적 행동으로 재벌·부자들의 이윤과 생산을 타격할 수 있는 조직노동자들이 전면에서 나서야 한다.

이런 마당에 터져 나온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사건은 정말 경악스럽다. 피해 여성에게 큰 고통을 준 파렴치한 가해자는 영구 제명되어야 마땅하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문제

를 처리하지 않아서 고통이 터지게 만든데다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퇴해야 한다. 물론 이 문제를 노동자 공격과 탄압에 이용하려는 이명박과 조중동의 시도는 경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하루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건설해 MB악법 철폐와 반이명박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는 투쟁에 헌신하면서 실추된 위신과 명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명박정권용산살인
진압규탄 및 열사추모

4차
범국민
추모대회

2월 14일(토) 오후 4시
청계광장

주최: 이명박 정권 용산 참사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